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2001. 7. pp.1~18
 © 한국노동연구원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

정진호*

본 연구는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이 조사되는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도는 경제위기 직후 1998년에 급격히 높아져 최근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소득점유율 및 분위수배율은 저소득층·중산층에서는 낮아졌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높아졌다. 다음으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전체 소득 불평등도 수준 및 그 변화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기여도는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재산소득 기여도는 여전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낮아졌다. 이는 적어도 임금근로자에 관한 한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소득불평등도,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유사지니계수

I. 머리말

1997년 말에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제약상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소득불평등에 대한 종합지표(예: 지니계수)를 측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한 소득불평등 수준 및 그 변화를 소득불평등에 대한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jjh@kli.re.kr)

종합적인 지표 및 분위별로 세분화된 지표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1990~2000년)를 이용하며, 분석대상은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가 임금근로자로서 소득이 조사되는 ‘근로자가구’에 한정한다²⁾.

II. 가구소득 불평등도 및 그 변화

1. 종합적인 지표의 변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지니계수이다. 이 밖에도 대수편차평균, 아트킨슨지수 등의 지표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보조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자가구의 전체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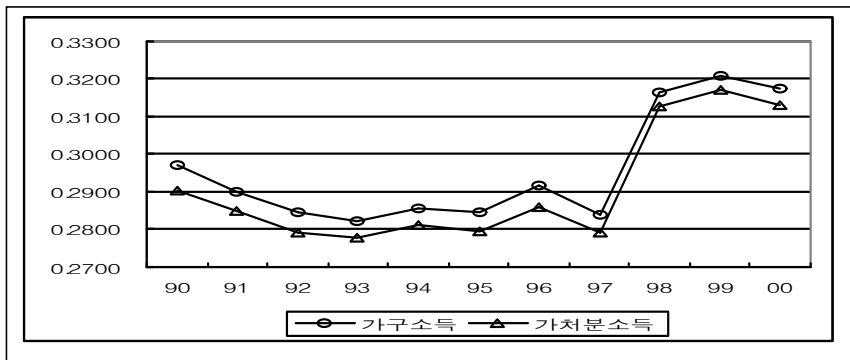
〈표 1〉 가구소득 불평등도 종합지표 추이

	가구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대수 편차 평균	아트킨슨지수			지니계수	
	가구원 미조정	가구원 조정		0.25	0.50	0.75	가구원 미조정	가구원 조정
1990	0.29723	0.28584	0.15846	0.03972	0.07816	0.11802	0.29048	0.27972
1991	0.29006	0.27907	0.15083	0.03793	0.07426	0.11087	0.28502	0.27463
1992	0.28470	0.27630	0.14666	0.03653	0.07211	0.10905	0.27918	0.27142
1993	0.28209	0.27453	0.14241	0.03523	0.06952	0.10446	0.27788	0.27097
1994	0.28566	0.27970	0.14607	0.03654	0.07159	0.10662	0.28106	0.27572
1995	0.28470	0.28078	0.14495	0.03607	0.07090	0.10612	0.27944	0.27598
1996	0.29168	0.28632	0.15191	0.03735	0.07371	0.11072	0.28585	0.28093
1997	0.28376	0.27931	0.14542	0.03559	0.07037	0.10586	0.27908	0.27495
1998	0.31638	0.30854	0.18899	0.04939	0.09500	0.14226	0.31273	0.30509
1999	0.32096	0.31481	0.19110	0.04979	0.09535	0.14068	0.31711	0.31108
2000	0.31736	0.31078	0.18653	0.04953	0.09366	0.13583	0.31302	0.30673

첫째,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1993년에 0.282로 가장 낮았고 1997년까지는 등락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에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니계수는 1998년에 0.316으로 1997년의 0.284에 비하여 급격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1999년 0.321, 2000년 0.31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⁴⁾.

둘째, 가구의 전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원수가 다르면 가구간 복지수준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가구원수의 차이를 조정한 이후의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는데⁵⁾, 가구원수의 차이를 조정한 지니계수가 ‘통상적인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수의 차이를 조정한 지니계수의 시계열적 변화는 통상적인 지니계수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가구소득 불평등도 추이(지니계수: 1990~2000)



셋째,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강제적인 지출부분을 공제한 소위 ‘가처분소득’은 이들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소득(pre-tax income)에 비하여 가구단위의 후생수준을 보다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 및 세전소득으로 측정된 소득불평등도의 차이는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를 가늠하도록 한다⁶⁾. 그러나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는 세전소득으로 측정된 통상적인 지니계수보다 1990~2000년에 평균적으로 1.7% 정도 낮게 나타나,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 및 그 변화는 가구원수의 차이를 조정하는가, 어떠한 형태의 소득개념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는가 등에 따라 분석 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구원수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은 세전소

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수준 및 그 변화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위별 세분지표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중산층 붕괴’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지니계수를 비롯한 각종 지표들은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로서, 이들 지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만으로는 어떠한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를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몇 개의 계층으로 세분한 분위별 소득점유율 및 분위수배율의 수준 및 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가 어떠한 계층에 보다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소득점유율(income shares)의 변화

우선, 가구의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 5개 계층, 즉 5분위(quintiles)로 세분하고 1/5분위를 저소득층, 2/5~4/5분위를 중산층, 5/5분위를 고소득층으로 정의하고, 소득점유율 지표를 이용하여 소위 ‘중산층의 양극화’ 여부를 분석하였다⁸⁾. 이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는데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도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1993년에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에 저소득층(1/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8.6%, 중산층(2/5~4/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53.9%로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지난 1998년 이후 8% 미만으로 낮아진 데 반하여,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지난 1999년 이후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점유율의 급격한 변화는 1997년에 대비한 2000년의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 증감률을 비교하면 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그림 2 참조).

예컨대, 2000년의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을 1997년과 비교하면 소득점유율은 저소득층인 1/5분위는 8.9%, 중산층인 2/5분위는 6.5%, 3/5분위는 4.1%, 4/5분위는 2.4% 낮아진 데 반하여, 고소득층인 5/5분위는 7.8% 높아졌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소위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2/5~4/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1997년에 54.5%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급격히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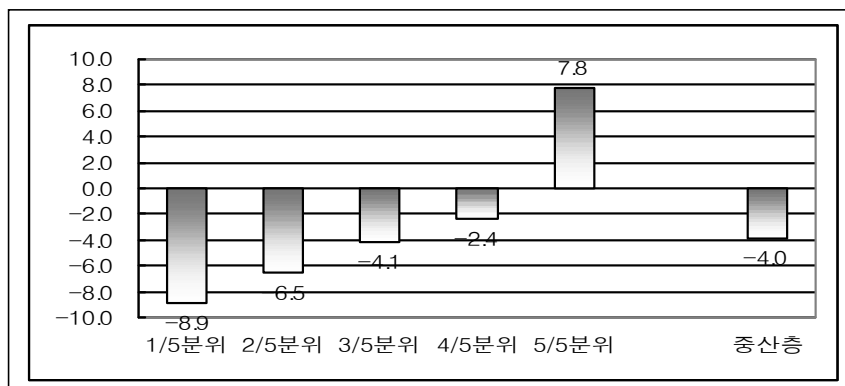
〈표 2〉 가구소득 계층별 소득점유율 추이

(단위: %)

	1/5분위	2/5분위	3/5분위	4/5분위	5/5분위	저소득층	중 산 층	고소득층
1990	8.3	13.2	17.1	22.5	38.9	8.3	52.8	38.9
1991	8.4	13.4	17.3	22.7	38.2	8.4	53.3	38.2
1992	8.5	13.5	17.5	22.8	37.7	8.5	53.8	37.7
1993	8.6	13.6	17.5	22.8	37.5	8.6	53.9	37.5
1994	8.5	13.4	17.4	22.9	37.8	8.5	53.7	37.8
1995	8.5	13.4	17.5	23.0	37.6	8.5	53.9	37.6
1996	8.2	13.2	17.5	23.1	38.0	8.2	53.8	38.0
1997	8.3	13.5	17.7	23.2	37.3	8.3	54.5	37.3
1998	7.3	12.8	17.1	22.9	39.9	7.3	52.8	39.9
1999	7.3	12.6	16.9	22.8	40.3	7.3	52.4	40.3
2000	7.5	12.7	17.0	22.7	40.2	7.5	52.3	40.2

〔그림 2〕 가구소득 계층별 소득점유율의 증감률(1997년 대비 2000년)

(단위: %)



저 2000년에는 52.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기인하여 소위 ‘중산층 붕괴’가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점유율의 변화율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1997년에 비하여 8.9% 하락한 데 반하여,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4.0%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폭이 중산층의 소득 하락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악화는 중산층의 몰락보다는 저소득층의 몰락에 보다

기인하고 있다는 표현이 보다 현실에 적합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상의 분석 결과는 조사시점에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도시근로자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은 조사시점에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되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경제활동상태가 변경된 임금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추적하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

나. 분위수배율(percentiles ratio)의 변화

다음으로, 소득점유율과 마찬가지로 분위수 및 분위수배율도 계층간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왜냐하면 이들 지표는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이상치(outliers)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분위수(percentiles)란 전체 가구에 대한 소득분포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수준으로부터 X%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 가구의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이를 10분위와 연관하여 살펴보면, P10 분위수는 1/10분위의 상한값이고, P50 분위수는 5/10분위의 상한값, 즉 중위값(median)이고, P90 분위수는 9/10분위의 상한값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 대표적인 분위수를 배수화한 지표가 분위수배율로서 P90/10, P90/50, P50/10 등이 계층간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수 및 분위수배율 수준 및 그 변화를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가 <표 3> 및 [그림 3]에 나타나 있는데,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분위수배율도 소득점유율 및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1993년에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993년에 P90/10은 3.59, P90/50은 1.91, P50/10은 1.88로서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분위수배율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경제위기 이후 크게 높아지고 최근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P90/50은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P90/10 및 P50/10은 모두 지난 1993년 이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 또는 중간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00년의 소득수준을 1997년과 비교하면 저소득층(P10)은 6.8%, 중간계층(P50)은 1.7% 낮아진 데 반하여, 고소득층(P90)은 오히려 0.2% 높아져, 소득계층간 소득증가율이 현저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점유율 및 분위수배율 등 분위별 세분지표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이후 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의 급격한 악화는 주로 저소득층의 분

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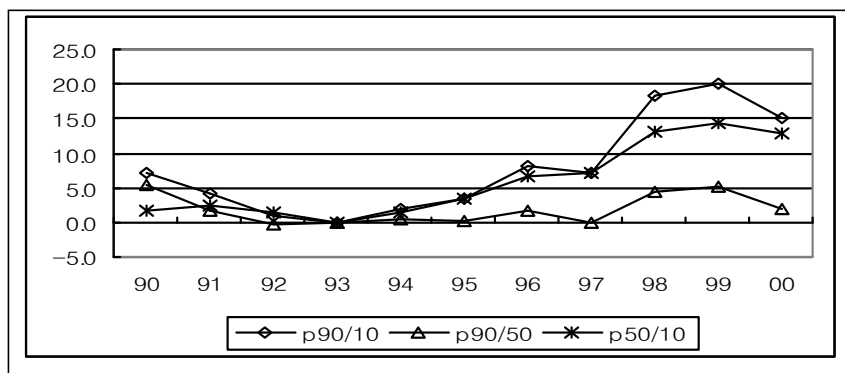
〈표 3〉 가구소득 분위수 및 분위수배율 추이

(단위: 천원/월, 배)

	P10	P50	P90	P90/10	P90/50	P50/10
1990	420	805	1,616	3.85	2.01	1.92
1991	517	1,000	1,937	3.74	1.94	1.93
1992	620	1,184	2,248	3.63	1.90	1.91
1993	688	1,294	2,465	3.58	1.90	1.88
1994	777	1,482	2,840	3.66	1.92	1.91
1995	860	1,673	3,199	3.72	1.91	1.95
1996	939	1,885	3,652	3.89	1.94	2.01
1997	1,000	2,018	3,846	3.85	1.91	2.02
1998	850	1,813	3,612	4.25	1.99	2.13
1999	872	1,877	3,760	4.31	2.00	2.15
2000	960	2,022	3,983	4.15	1.97	2.11

〔그림 3〕 가구소득 분위수배율의 증감률 추이(1993년 대비)

(단위: %)



Ⅲ. 불평등도의 소득원천별 분해

지금까지 1990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 또는 분위별 세분지표

의 수준 및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소득불평등도 악화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의 몇몇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 악화가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보다 재산소득의 불평등도 악화에 보다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전체 소득을 구성하는 개별 소득원천 자체에 대한 지니계수 또는 유사(pseudo) 지니계수의 단순한 비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소득원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구의 전체 소득은 ①가구주 근로소득, ②배우자 근로소득, ③기타가구원 근로소득, ④사업 및 부업소득, ⑤재산소득, ⑥이전소득, ⑦비경상소득 등으로 세분한다¹⁰⁾.

가. 정태적 요인분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한 소득불평등 수준 및 그 변화에 대하여 1997년 및 2000년 연간자료와 변이계수자승(SCV)의 1/2인 $GE(2)$ 지표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 기여도로 분해한다¹¹⁾.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하나의 지표인 $GE(2)$ 와 개별 소득원천 f 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절대적인 기여도 S_f , 상대적인 기여도 s_f 와의 관계는 식(1)로 표현된다.

$$S_f = s_f \cdot GE(2) = \rho_f \cdot X_f \sqrt{GE(2) \cdot GE(2)}_f \dots\dots\dots (1)$$

단, ρ_f : 소득원천 y_f 와 전체 소득 y 의 상관계수
 X_f : 소득원천 y_f 의 전체 소득 y 에 대한 비율($\equiv \mu_f / \mu$)

이들 수식을 이용하여 가구의 전체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분석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는데, 주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에는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는 근로소득이 59.0%(가구주 근로소득 40.2%, 배우자 근로소득 10.4%, 기타가구원 근로소득 8.4%)로서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비경상소득이 19.7%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는 4.2%에 불과하였다.

둘째, 그러나 2000년에는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는 퇴직금, 보험금 등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비경상소득이 65.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근로소

득 및 재산소득의 상대적 기여도는 단지 각각 30.2% 및 1.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비경상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가 급격히 높아진 시점은 1998년 이후이다²⁾.

그런데 이와 같은 이례적인 현상이 경제위기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도입, 고용관행의 변화에 기인한 빈번한 직장이동 등의 제도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항구적인 현상인지를 구분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물론 비경상소득은 주로 퇴직금, 보험금 등 매우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³⁾. 그리고 설사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비경상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립하기란 더더욱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범주에서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만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개별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다시 분석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으며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전체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요인분해(1997, 2000)

(단위: %, 천원/월)

		상대적 기여도 $s_f(\%)$	절대적 기여도 S_f	개별소득 불평등도 $GE(2)_f$	평균값 μ, μ_f
1997	전 체 가 구 소 득	100.0	0.18550	0.18550	2,287
	가 구 주 근 로 소 득	40.2	0.07457	0.16519	1,543
	배 우 자 근 로 소 득	10.4	0.01923	2.29153	214
	기 타 가 구 원 근 로 소 득	8.4	0.01550	3.19019	182
	사 업 및 부 업 소 득	4.1	0.00753	7.09500	79
	재 산 소 득	4.2	0.00782	10.36549	54
	이 전 소 득	13.0	0.02420	24.04165	69
	비 경 상 소 득	19.8	0.03665	7.07471	147
2000	전 체 가 구 소 득	100.0	0.47961	0.47961	2,387
	가 구 주 근 로 소 득	22.4	0.10729	0.21549	1,639
	배 우 자 근 로 소 득	4.8	0.02307	3.01595	202
	기 타 가 구 원 근 로 소 득	3.0	0.01447	4.24869	167
	사 업 및 부 업 소 득	1.8	0.00874	6.24021	94
	재 산 소 득	1.6	0.00763	15.13509	45
	이 전 소 득	1.2	0.00581	11.12356	66
	비 경 상 소 득	65.2	0.31260	57.53142	173

〈표 5〉 경상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요인분해(1997, 2000)

(단위: %, 천원)

		상대적 기여도 $s_f(\%)$	절대적 기여도 S_f	개별소득 불평등도 $GE(2)_f$	평균값 μ, μ_f
1997	전체 경상 가구소득	100.0	0.16145	0.16145	2,140
	가구주 근로소득	51.9	0.08387	0.16519	1,543
	배우자 근로소득	13.6	0.02200	2.29153	214
	기타가구원근로소득	10.5	0.01692	3.19019	182
	사업 및 부업소득	5.3	0.00848	7.09500	79
	재산소득	5.1	0.00822	10.36549	54
	이전소득	13.6	0.02197	24.04165	69
2000	전체 경상 가구소득	100.0	0.18096	0.18096	2,214
	가구주 근로소득	63.0	0.11397	0.21549	1,639
	배우자 근로소득	14.7	0.02664	3.01595	202
	기타가구원근로소득	9.5	0.01720	4.24869	167
	사업 및 부업소득	5.3	0.00957	6.24021	94
	재산소득	4.0	0.00731	15.13509	45
	이전소득	3.5	0.00626	11.12356	66

첫째,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1997년 및 2000년 모두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각각 76.0% 및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 중에서도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는 1997년 및 2000년에 각각 51.9% 및 63.0%로 다른 소득원천보다도 가장 높았다.

둘째, 재산소득이 전체 경상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상대적 기여도는 1997년 및 2000년에 각각 5.1% 및 4.0%에 그쳤다. 이는 적어도 임금근로자에 관한 한 재산소득의 불평등도가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⁴⁾.

나. 동태적 요인분해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한 소득불평등도 변화가 어떠한 소득원천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 $GE(2)$ 를 식 (3)과 같이 분해한다.

$$\% \Delta GE(2) = \frac{\Delta GE(2)}{GE(2)_t} = \frac{\sum_f \Delta S_f}{S_f / s_f} = \sum_f s_f \% \Delta S_f \dots\dots\dots (3)$$

이 수식을 이용하여 경상소득 기준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분석 결과가 <표 6>에 나타나 있는데,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기준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는 1997~2000년에 12.1%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 불평등도 변화가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에 미친 기여율이 21.7%(상대적 기여도는 179.6%)에 이르고 있다. 특히 근로소득 중에서도 가구주의 근로소득 기여율은 18.6%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재산소득 불평등도 변화의 기여율은 -0.6%, 이전소득 불평등도 변화의 기여율은 -9.7%로서 이들 소득의 불평등도 변화는 전체소득의 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6> 경상 가구소득 불평등도 변화의 소득원천별 요인분해(1997 → 2000)

(단위: %)

	절대적 기여율	상대적 기여도
전 체 경 상 가 구 소 득	12.1	100.0
가 구 주 근로 소 득	18.6	154.4
배 우 자 근로 소 득	2.9	23.8
기 타 가 구 원 근로 소 득	0.2	1.4
사 업 및 부 업 소 득	0.7	5.6
재 산 소 득	-0.6	-4.6
이 전 소 득	-9.7	-80.6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위기를 전후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소득 불평등도 및 그 변화는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의 불평등도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 수준 및 그 변화에 미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함을 파악할 수 있다.

다. 기존 연구와의 비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견 매우 상이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보

다는 재산소득의 불평등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 불평등도보다 자산 소유의 불평등도가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즉 가구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10분위별로 분류되어 발표된 각 분위별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을 각각 추출하여 지니계수를 구하고, 이들 지니계수를 단순비교하고 있다⁹⁾. 예컨대, 이우성(2000)은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1997년의 0.261에서 1999년에 0.286으로 약간 높아진 데 그치고 있으나, 재산소득 지니계수는 1997년 0.465에서 1999년에 0.535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보다 재산소득의 지니계수가 크기 때문에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상대적 기여도가 크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 소득원천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득 중에서 재산 및 근로소득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재산 및 근로소득 자체의 불평등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는 경우에만 상대적인 기여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미미하며 오히려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 간의 방법론상 주요한 차이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사 지니계수를 추정하여 단순비교하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GE(2)$ 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로 분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지니계수는 소득원천별로 분해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니계수를 이용하더라도 본 연구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지니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세 가지 지니계수란 다음과 같다. ① 자체 지니계수로 이는 전체 소득이 아닌 소득원천(예: 근로소득 또는 재산소득 등) 각각을 10분위로 세분하여 추정한 수치이다. ② 유사 지니계수로서 이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분류하고, 각 분위에 포함된 개별 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수치이다. ③ 누적 지니계수로서 이는 전체 소득 중에서 우선 가구주 근로소득을 10분위로 세분한 다음에 지니계수를 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구주 근로소득에 배우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10분위로 세분한 지니계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등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이를 다시 10분위로 세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한다.

〈표 7〉 소득원천별 지니계수(1997, 2000)

		가구 전체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 부업	재산 소득	이전 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							
1997	유사	0.27817	0.26202	0.22344	0.40811	0.41748	0.45105	0.46470	0.38893	0.36513	0.28376
	자체	0.28384	0.28945	0.29847	0.80621	0.85019	0.89443	0.89407	0.90000	0.70363	0.28376
	누적	0.28834	0.28945	0.29847	0.30393	0.28945	0.28767	0.28832	0.28384	0.28376	0.28376
2000	유사	0.29394	0.28695	0.25750	0.44583	0.38390	0.39749	0.48728	0.22741	0.61754	0.31736
	자체	0.29966	0.31302	0.32584	0.83514	0.86232	0.88418	0.90000	0.88315	0.85117	0.31736
	누적	0.29966	0.31302	0.32584	0.33110	0.31302	0.30875	0.30894	0.29966	0.31736	0.31736

이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유사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1997년 및 2000년에 각각 0.262 및 0.287 그리고 재산소득은 각각 0.465 및 0.487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우성(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는 유사 지니계수로 추측된다.

그러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는 유사 지니계수가 아니라 오히려 누적 지니계수이다. 실제로 2000년의 경우 근로소득의 자체 지니계수는 0.313인데, 근로소득에 자체 지니계수가 매우 높은 사업·부업소득(0.884), 재산소득(0.900), 이전소득(0.883)을 합산한 경상소득의 자체, 즉 누적 지니계수는 0.30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 이외의 경상소득을 포함하면 소득불평등도가 오히려 낮아져, 특히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음을 시사한다⁶⁾.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GE(2)* 지표를 사용하여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상이하지 않다.

따라서 비록 재산소득 등이 근로소득보다 그 자체로 불평등도가 크지만, 이를 근거로 재산소득 등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소득원천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임금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IV. 맺음 말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는 최근까지도 그다지 완화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

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한 소득불평등 수준 및 그 변화를 소득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 및 분위별로 세분화된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임금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지난 1990년 이후 1997년까지는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경제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에 급격하게 높아져 최근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각종 지표들의 시계열적 변화는 가구원수의 차이를 통제하는가, 가처분소득을 이용하는가 등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둘째, 분위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위기 전후의 계층간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소득점유율 및 분위수배율은 저소득층에서는 크게 낮아지고 중산층에서는 약간 낮아진 데 반하여,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수준의 악화가 특히 저소득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비록 경제위기 이후에 비경상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가장 높았지만, 일상적으로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 비경상소득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소득분배정책을 수립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은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전체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는 2000년에도 근로소득이 87.2%(가구주 63.0%, 배우자 14.7%, 기타가구원 9.5%)로 가장 높았지만, 재산소득은 4.0%에 불과하였다. 이는 적어도 임금근로자에 관한 한 재산소득의 불평등도가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도의 수준 및 그 변화를 보다 다양한 지표로 측정하고,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자료의 제약상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소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득불평등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Endnotes

- 1) 최근 소득분배에 대한 주요한 연구로 현진권·강석훈(1998), 류상영·강석훈(1999), 박성준(2000), 이우성(2000), 정건화·남기곤(2000), 정광수(2000), 정진호·최광식(2001) 등 참조.
- 2) 본 연구에서는 표본조사인 「도시가계조사」의 모집단화를 통하여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 수준 및

- 그 변화를 분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이 조사되지 않는 근로자 이외의 가구에 대하여 소득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정하는가 그리고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등에 따라 상반된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연간자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의 새로운 가중치부여방식을 그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각종 지표들이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예: 지니계수)와 약간 다르게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약상 ‘분기단위’ 또는 ‘연간단위’의 가구별 소득은 측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청과 마찬가지로 가구별로 자료를 합산하지 않고 동일한 가구의 월별 자료라 하더라도 각각을 별개의 가구로부터 생성된 자료로 간주한다.
 - 4)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도시가계조사」는 5년 단위로 표본설계가 변경된다. 따라서 1998년의 소득 불평등도 변화는 ‘표본 변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 변경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 5) 가구원수의 차이를 조정한 등가소득(等價所得) $W = Y / S^E$ (단, Y : 가구소득, S : 가구원수, E : 동등화지수)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Atkinson, Rainwater & Smeeding(1995)에서와 같이 E 를 0.5로 가정한다.
 - 6) 본 연구에서 가처분소득은 통계청과는 달리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 중에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만을 공제한 수치로 정의한다. 왜냐하면 비소비지출 중에서 ‘기타 비소비지출’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하여 강제된 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자료의 제약상 본 연구에서는 분석되고 있지 않지만,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에서 ‘공적보조금’이 공제된 소득과 세전소득 각각에 대한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이들을 비교하여야 한다.
 - 7) 이 밖에도 대수편차평균, 아트킨슨지수 등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다른 지표들도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 8) ‘중산층의 붕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을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 9) 소득분배의 양극화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면자료가 아닌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제위기를 전후한 패널자료는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설계 변경으로 구축할 수 없다.
 - 10) 참고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구소득은 다음과 같이 세분되어 있다.

$$\begin{aligned} \text{가구소득} &= \text{경상소득} + \text{비경상소득} \\ \text{경상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사업 및 부업소득} + \text{재산소득} + \text{이전소득} \\ \text{근로소득} &= \text{가구주 근로소득} + \text{배우자 근로소득} + \text{기타가구원 근로소득} \end{aligned}$$
 - 11)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Shorrocks(1982) 및 Jenkins(1995) 참조.
 - 12)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정진호·최강식(2001 p.70) 참조.
 - 13) 비경상소득은 경상소득 이외의 교제·축의·조의 등에 의하여 받은 금액·복권·경품권·경마 등 오락경기에 의한 상금·손해보험 탄 금액·퇴직금·연금일시금·장학금 등으로 받은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 14)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산소득이 제대로 조사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재산소득도 실제보다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강석훈(2000) 참조.
 - 15) 참고로 이는 소득원천 자체에 대한 지니계수가 아니라 유사(pseudo) 지니계수이다. 실제로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각각의 소득원천에 대한 유사 지니계수만이 산출될 수 있다.
 - 16) 이정우·황성현(1998)도 소득의 분배보다 자산의 분배에 문제가 보다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자산의 분배문제를 분석할 수 없지만, 자산의 분배 역시 부의 실현이 이루어질 경우 재산소득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역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논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석훈. 「서베이데이터와 집계데이터의 비교연구」. 『계량경제학보』 11권 1호 (2000. 3): 41-70.
- 류상영·강석훈.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9.
- 박성준. 「금융위기 이후의 소득 불균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3권 2호 (2000. 6): 61-79.
- 성명재.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소비세의 변화 분석』,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0.
- 유경준.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변화요인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이우성. 「자산소유 편중과 소득불평등 심화」. LG경제연구원, 『주간경제』 594호 (2000. 10): 4-7.
- 정건화·남기곤.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윤진호·유철규 편, 『구조 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서울: 풀빛 (2000. 5): 323-350.
- 정광수. 『한국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0.
- 정진호·최강식. 『임금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요인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46권 3호 (1998. 9): 145-167.
- Atkinson, A.B., Rainwater, L., & Smeeding, T.M.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 OECD, 1995.
- Burkhauser, R.V., Holtz-Eakin, D., & Rhody, S.E. "Labor Earnings Mobility and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during the Growth Years of the 1980s." NBER Working Paper 5988, NBER.
- Burniaux, J.M. et. 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y."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89, OECD, 1998.
- Cowell, F.A. "Measurement of Inequality." in Atkinson, A.B. & Bourguignon, F.(ed.),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North Holland, Amsterdam, (2000): 87-166.
- Jenkins, S.P.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 UK, 1971-1986.” *Economica* 62 (245) (February 1995): 139-191.
- Johnson, G.E. “Changes in Earnings Inequality: the Role of Demand Shif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 (2) (Spring 1997): 41-54.
- Jones, A.F., & Weinberg, D.H. *the Changing Shape of the Nation's Income Distribution: 1948-1998*. U.S. Census Bureau, 2000.
- Katz, L.F., & Autor, D.H. “Changes in the Wage Structure and Earnings Inequality.” Ashenfelter, A., & Card, D.(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A (1999): 1463-1555.
- Shorrocks, A.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 (January 1982): 193-211.
- Topel, R.H. “Factor Proportions and Relative Wages: the Supply-Side Determinants of Wage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 (2) (Spring 1997): 55-74.